

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8도14424 판결
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
판결

【판시사항】

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, 제24조 제3항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둔 취지

【피 고 인】 피고인 1 외 2인

【상 고 인】 피고인들

【원심판결】 서울북부지법 2018. 8. 23. 선고 2018노299 판결

【주 문】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가. ○○ 시영 △단지 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(이하 ‘이 사건 조합’이라 한다)이 조합원들과 체결한 각각의 분양계약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‘추가부담금’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에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‘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’에 해당한다.

나.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으로 ‘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(제9호)’과 ‘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(제10호)’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.

다. 이 사건 조합이 2012. 1. 15. 임시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,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등을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, 2013. 2. 22. 임시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의결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‘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’에 관한 의결에 해당할 뿐이고, 이로써 같은 항 제9호의 ‘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부담내역’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3.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